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운용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Effects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이 영 숙* · 정 순 여** · 김 재 희***

(Young-sook Lee · Soon-yeo Jung · Jae-hee Kim)

— 목 차 —

- I. 서 론
- II.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 IV. 결 론

I. 서 론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정부는 근거과세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인프라 제도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추적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세금계산서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보다 근거과세가 명확하여 세액 탈루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거래의 각 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제상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능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을 상호 대사할 수 있는 근거과세 자료로서의 기능이다. 거래당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계장(제1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사자 중 일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누락 또는 부당매입세액공제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 등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지만,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상화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이 제도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자료상 색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자료상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자료상 등의 신속한 색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기 즉,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전송하는 제도로서 신속한 상호대사를 통해 위장·가공거래 등 탈세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 중개업사업자 및 자체구축(ER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장기용, 2010). 이때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병행하여 발행·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전자상거래 등 거래의 유통구조를 감안한 사업자의 편의성 도모가 주목적이었다. 그런데 세계적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 전통적인 거래에서 전자거래로 그 거래유형이 복잡·다양하게 바뀌면서 세금계산서를 수동 작성·보관·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 취지에서 제도적으로 진정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졌다.

2008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 등 도입여건이 성숙되자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거쳐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시행초기 납세자의 적응 혼란이 예상되어 발행의무화 시기를 1년 연장하게 되었고 2011년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였다. 2012년부터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까지도 「발행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초기 시스템구축 비용과 운용유지에 대한 비용이 따르게 되고,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등의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제도도입 후 먼저 시행에 참여한 사업자¹⁾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용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2년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참여 유도에 과세관청의 홍보교육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2010년부터 법인사업 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용에 들어갔다. 이어서 2011년에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시범 운용 중에 있다. 시행 초기인 2010년, 제도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도 부족과 중소기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의무 시행을 1년 뒤로 늦추면서 본격적으로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발급의무화 하고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 발급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법에 정한 공급시기에 다음의 전자적 방법²⁾으로 발급³⁾하는 세금계산서⁴⁾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구축한 이중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RP,

1) 2010년 시범 운용한 제주지역 법인사업자와 2011년 시범운용한 개인사업자 중 일부(개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시행에 참여한 제주지역 사업자)

2) 전자적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②에 규정하는

* 표준인증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통한 발행(1, 2호)

* 국세청 「e-세로」 및 ARS를 통한 발행(3호)

* 현금영수증장치를 통한 발행(4호)

3)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 주는 것(전달)을 말함

⇒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고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한 때, 내용확인 여부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전자 파일 자체가 이메일에 도달한 때, 수신확인 여부불문

이 때 우편(이메일)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한다.

ASP)간 세금계산서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고 검증방식의 일원화, 확장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대상으로는 항목 등 파일형식, 전자서명, 전송방식을 표준화 했고 이와 같은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는 승인번호(24자리)가 있는데 즉, 작성연월일(8자리의 숫자), 대용량연계사업자의 표준인증번호(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8자리 부여), 발행 일련번호(숫자와 영어 소문자로 구성된 8자리, 대용량연계사업자가 자체 부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를 통한 발급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중개사업자 ASP,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한 발급방법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터넷 취약 계층 등을 고려하여 ARS 발행 또는 VAN단말기 발행방법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은 대용량 연계대상사업자는 자체적으로 ERP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세금계산서발급 중개 사이트(ASP)에 가입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적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 없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세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검토

전자세금계산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최근의 연구들이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시기가 2008년 12월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 연구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배경과 타당성 등을 다른 선행연구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유정숙(2009)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e-메일 등록의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혜택 금액 인상,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경감,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홍보활동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승룡(2009)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부가가치세제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세금계산서 수

4) 종이세금계산서는 부칙 제16조①의 별자11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자체'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파일자체'를 말한다.

수질서의 정상화는 부가가치세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였고,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초기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회계처리시스템과의 연동성 향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표, 즉 도입효과 중 납세협력비용 절감보다 거래행위의 투명성 확보(자료상 감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손지영(2010)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도입효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서술하고 그에 대한 2010년 시행초기 수집된 부정적 효과로서의 문제점을 제도적 법률적 관점으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ASP사업자의 수수료 등에 대한 담합 등, 수시 감시 체제의 구축과 설립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 장기적인 과세제도의 방향성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장래의 도입효과성이 일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 제검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e-세로 발행 시 수신 동의 후 처리, 전산보안 강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도 시행시기를 일치하게 하여 법적용 형평성을 이루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합계표 제출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전송기한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용(2010)은 ASP시스템 사업자의 담합에 따른 정부의 수수료 등에 대한 공정거래 수시감시체계 수립, 매입자지위 우월적 남용으로 인한 거래당사자간 마찰, e-세로 대량일괄 발행시스템으로의 개선, 시스템사업자 등의 정보유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보안강화 등의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금액을 현재 건당 150원 내지 200원으로,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간이과세제도 폐지, 국세청 「e-세로」, ASP/ERP사업자 등의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여 회계프로그램에 자동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제도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몽운동과 교육,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국민의 납세의식 전환을 위한 납세환경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 차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행원년 실제 시범운용 한 사업자의 운용효과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많은 전문가 및 시범운용 사업체의 회계담당직원 등과 모니터링 하면서 얻은 결론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초기 실제 운용한 사업자의 실행 경험상의 목소리를 넓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와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문헌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운용한 사업체의 경험적 제안을 설문조사에 의하여 분석한 실증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한 법인 및 2011년 1분기 발행에 참여한 개인사업자 중 분석을 위해 추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시행초기 도입효과가 제대로 거두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제주도내 시범 운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용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웹기반을 이용, e-메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부터 기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담당자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도입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의견수렴 하였다.

회수된 설문 응답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홍보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효과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순위를 빈도분석하였다. 이것으로 2012년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발행참여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6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1,350부의 설문을 발송하여 총 142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⁵⁾.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회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제주도내 전자세금계산서 시범 운용한 사업자의 e-메일 주소를 수집한 후, 웹기반을 통한 이메일공법으로 설문지를 송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표 1〉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현황

배부된 설문지(A)	회수된 설문지			설문지회수율 (B/A)	유효회수율 (C/B)
	계(B)	분석가능(C)	분석제외		
1,350부	142부	142부	0부	11%	100%

3.2. 분석결과

3.2.1. 기술통계량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e-세로」	94	(66.2%)
	ASP	38	(26.8%)
	ERP	9	(6.3%)
	세무서대리발행	1	(0.7%)
사용 시스템 개수(ASP/ERP)	1개	43	(70.5%)
	2~3개	18	(29.5%)
사용 시스템 사용수수료(ASP/ERP)	10,000원 미만	37	(64.9%)
	10,000~35,000원 미만	10	(17.5%)
	35,000~50,000원 미만	4	(7.0%)
	50,000~100,000원 미만	3	(5.3%)
	100,000원 이상	3	(5.3%)
사업자 유형	법인사업자	101	(71.1%)
	개인사업자	41	(28.9%)
사업년수	3년 미만	20	(14.1%)
	3~5년 미만	12	(8.5%)
	5~10년 미만	43	(30.3%)
	10~20년 미만	45	(31.7%)
	20년 이상	22	(15.5%)

업종	제조업	21	(14.8%)
	건설업	38	(26.8%)
	도소매업	28	(19.7%)
	운수업	4	(2.8%)
	음식숙박업	5	(3.5%)
	금융보험업	1	(0.7%)
	전문직	22	(15.5%)
	부동산	3	(2.1%)
	기타	20	(14.1%)
2010년 총 매출액	5억 미만	56	(39.4%)
	5~10억 미만	25	(17.6%)
	10~50억 미만	37	(26.1%)
	50~100억 미만	13	(9.2%)
	100억 이상	11	(7.8%)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발행건수	10건 미만	57	(40.1%)
	10~50건 미만	45	(31.7%)
	50~150건 미만	23	(16.2%)
	150~300건 미만	8	(5.6%)
	300건 이상	9	(6.3%)
응답자 직책	대표자	36	(25.4%)
	회계담당	94	(66.2%)
	영업담당	4	(2.8%)
	기타	8	(5.6%)

응답자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발행방법별 특성에 있어 제주지역의 사업자는 대체로 국제청 「e-세로」 사용자가 66.2%로 가장 많고, 나머지 ASP/ERP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있어서도 사용개수가 1개 사용이 70.5%를 차지하고 있고, 월별 시스템 사용료 또한 35,000원 미만이 82.4%를 차지하고 있다. 월별 발행건수별 분포도 10건 미만이 40.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업연수로는 10~20년 미만 사이 사업자가 31.7%,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및 건설업이 46.5%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미만이 39.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3.2.2. 운용효과 만족도 분석

우선,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 홍보교육의 만족도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이 충분하였다	43(30.3%)	61(43.1%)	38(26.6%)	142 (100%)
도입취지 등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15(10.5%)	58(40.9%)	69(48.6%)	
관련 규정 및 메뉴얼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40(28.2%)	61(43.0%)	41(28.8%)	
전반적 만족도 평가	30(21.1%)	75(52.8%)	37(26.1%)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운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이 절감효과, 업무량 감소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거래의 투명성 제고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납부 편의성 향상되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운용의 효과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납세협력비용 절감	53(37.3%)	53(37.3%)	36(25.4%)	142 (100%)
거래의 투명성 제고	18(12.7%)	45(31.7%)	79(55.6%)	
신고·납부 편의성 향상	38(26.7%)	44(31.0%)	60(42.2%)	
업무량 감소	63(44.4%)	38(26.8%)	41(28.9%)	
전반적 효과성 평가	40(28.2%)	54(38.0%)	48(33.8%)	

3.2.3.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분석

운영상의 문제점은 거래투명성, 납세협력비용 절감, 시스템 과부하, 그리고 사업자 개별 정보 보호별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1) 거래투명성

①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3.2%로 나타나고 있어 「발급시기」의 적용 착오의 문제, 즉 「발급시기」의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2.0%로 나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 「매입자승인」 후 전송”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③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6.6%로 나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의 전송 전 「취소·수정·삭제」 등 가능”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④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7.3%로 나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 전송기한(익월15일)여유”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⑤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1.2%로 나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 「취소·수정·삭제」자유로움”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운용상의 문제점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해당 없음	총합계
거래투명성						
①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공급시기(발행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지연발행/지연전송/미발행/미전송 우려가 있다.	18 (22.2%)	28 (34.6%)	35 (43.2%)	81 (100%)	61	142
②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매입자승인」 후 전송으로 인한 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30 (39.0%)	30 (39.0%)	17 (22.0%)	77 (100%)	65	

③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전송 전 「취소 수정 삭제」 등 가능하므로 마감시한 압박전송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29 (36.7%)	29 (36.7%)	21 (26.6%)	79 (100%)	63	
④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전송기한(익월1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29 (37.7%)	27 (35.0%)	21 (27.3%)	77 (100%)	65	
⑤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취소·수정·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28.8%)	24 (30.0%)	33 (41.2%)	80 (100%)	62	

납세협력비용절감 효과

⑥ 「e-세로」시스템은 대량일괄발행이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32 (34.8%)	25 (27.2%)	35 (38.0%)	92 (100%)	50	
⑦ 「e-세로」시스템은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25 (27.2%)	25 (27.2%)	42 (45.6%)	92 (100%)	50	
⑧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강요로 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30 (38.0%)	26 (32.9%)	23 (29.1%)	79 (100%)	63	
⑨ 「e-세로」시스템은 발행 후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수정신고증가 및 수정처리소명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23 (20.7%)	34 (30.6%)	54 (48.7%)	111 (100%)	31	142
⑩ ASP시스템 이용·발행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되므로 「e-세로」 조회 후 다운 입력하는 이중업무 처리를 해야한다.	22 (25.3%)	23 (26.4%)	42 (48.3%)	87 (100%)	55	
⑪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이 가중된다.	23 (20.9%)	22 (20%)	65 (59.1%)	110 (100%)	32	
⑫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비용이 소요된다.	27 (22.1%)	24 (19.7%)	71 (58.2%)	122 (100%)	20	

시스템과부하 문제

⑬ 전송마감시한 압박 일시 대량전송 등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이 우려된다.	24 (21.4%)	35 (31.3%)	53 (47.3%)	112 (100%)	30	142
--	---------------	---------------	---------------	---------------	----	-----

사업자개별정보 보호 효과

⑭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14 (14.4%)	49 (50.5%)	34 (35.1%)	97 (100%)	45	142
--	---------------	---------------	---------------	--------------	----	-----

(2) 납세협력비용 절감

⑥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38.0%로 나타나고 있어 “「e-세로」시스템 대량일괄발행 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5.6%로 나타나고 있어 “「e-세로」시스템 대량일괄발행 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⑧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9.1%로 나타나고 있어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강요”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⑨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8.7%로 나타나고 있어 “「e-세로」시스템 발행 후 「수정삭제」 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⑩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8.3%로 나타나고 있어 “ASP시스템 이용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⑪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59.1%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⑫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58.2%로 나타나고 있어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 병행”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스템 과부하

⑬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7.3%로 나타나고 있어 “전송마감시한 압박 일시 대량전송”의 문제가 시스템 과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

⑭번 항목 분석결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35.1%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의 안정성 및 신뢰성”의 크기가 사업자 개별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2000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것은 2008년 12월이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거쳐 2010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행의무화 시기는 1년 연장된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였다. 2012년부터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까지도 「발행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제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제도에 있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i)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ii)제도의 도입 취지인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공평과세 실현, iii)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⁶⁾ 절감과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본 제도가 사업자와 정부,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 실제 운용상 또는 입법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고쳐야 할 개선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특히, 운용상의 문제점 중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이 가중된다는 것과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비용이 소요된다는 신속히 고쳐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제상 새로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법률적으로 확고한 시스템(국세청 e-세로)장치 마련과 납세자의 새로운 제도적용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으로 제주지역 사업자만을 표본으로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나 대표자로 한정하다보니 설문지 회수비율이 다소 부진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견개진에 있어 객관성 또는 대표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

6)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으로 “징세비용”은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이 둘을 합해서 조세징수비용이라 한다.

고, 본 연구의 결과가 제주지역 또는 전국의 모든 납세자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직접 운용한 사업자의 운용상 효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직접 모니터링 한 최초의 시도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계점은 있으나, 향후의 연구에서 타 수도권 지역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연구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문헌연구, 탐색적 연구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운성·이윤자(2010),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 국세청 박병완(2011), 실무상과세쟁점 및 사례중심 부가가치세 실무, 세연 T&A.
- 국세청(2009),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자료”.
- 국세청(2011), 「e-세로」홈페이지 자료.
- 국세청(2011.5), (2010.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국세청자료(2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Q&A”.
- 국세청자료(2011), “한 눈에 보는 국세통계”.
- 국세청자료(2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핵심Q&A)”.
- 김봉근, 「2005년 부가가치세 해설」, (주)영화조세통람사.
- 김지옥(2009),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행정 정상화를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전공 석사학위논문.
- 민소영(2010),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박보근(2010), “e-세금계산서 시대 개막”, 월간 해양한국, Vol.2010 No.1.
- 손지영(2010). “부가가치세제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시아 경제기사(2009-09-17), “정부 징세비용 줄이다 납세자 부담 커져”, 세무사회.
- 유정숙(2009),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회계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승룡(200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전자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회계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충희(2010), “자료상 규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세무관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기용(2010),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영컨설팅연구 제10권 제3호,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프레스인 경제뉴스 자료(2009-09-17), “세수 100원당 납세협력비용, 정세비용의 6.5배”,

“납세협력비용 일부, 정부가 보전해줘야”, 세무사회.

한장석·김용관, 2011년 부가가치세2011, 光敎.

허 옥(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세무업무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계간 세무
봄호, 한국세무사회.